

‘무공천’ 불안한 野 ... 기초후보 우회지원 고심

공동위원장 사진 활용·합동 유세 등 검토 단일 후보 교통정리도 ... 與 “꼼수” 비판

조만간 출범할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초선거에서의 우회 지원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기초선거에서의 무공천을 천명했지만 무대책으로 일관할 경우, 여당 후보가 반사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새정치민주연합 성향 후보자들이 기초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무공천에 대한 원망이 쏟아질 수밖에 없고 일부 후보자들이 승리한다고 해도 복당 보장도 없다. 특히, 기초위원과 기초단체장이 실질적으로 정당의 핵심 기반이라는 점에서 기초선거 패배는 당의 뿌리를 흔들리게 하면서 차기 총선과 대선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 때문에 당 안팎에서는 무공천 원칙을 지키면서도 야권 단일 후보로의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실제로 당내 일각에서는 공직선거법 84조를 지렛대로 새정치민주연합이 지지하는 무소속 후보를 부각시키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공직후보자 84조는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 정당이 무소속 후보자를 지지하는 경우, 해당 후보가 이 사실을 표방할 수 있다. 즉, 새정치의 뜻에 부합하는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위원이 사실상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임을 표방하고 당에서는 이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론으로는 김한길, 안철수 공동 위원장의 사진을 기초선거 후보자의 전단에 활용토록 허용하는 방식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새정치민주연합의 광역단체장 및 광역의원 후보들이 신당 성향의 기초후보자와 비슷한 장소에서 유세를 하는 등 사실상의 합동 유세를 벌이는 방식도 논의 대상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각 지역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자를 자처하는 인물들이 난립할 가능성이 높아 혼란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시민사회에서 야권단일후보추진 위원회를 만들어 기초선거 출마자들의 단일화를 유도, 여당과의 양자 구도를 만

드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고위 관계자는 “지역별로 민주당 인사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들어 야권 단일후보를 선출한다면 상당한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기초선거 지원이 무공천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당장 여당에서는 “정당 공천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더니, 실질적으로 정치적 꼼수를 부리는 것 아니냐”며 대국민 공세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 관계자는 “무공천 원칙을 지킬 경우, 기초선거 패배를 피할 수 없는 현실인 반면 물 밑 지원에 나설 경우, 무공천 원칙이 빛을 바랄 수밖에 없다”며 “가장 좋은 방법은 시민사회 야권후보 단일화에 나서 여당 후보와의 양자 구도를 형성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신당 지지도 30% ... 소폭 하락

한국갤럽 조사 ... 호남선 53%

통합신당 지지도가 통합 선인 2주도 안 돼 소폭 하락세로 돌아선 가운데 호남 지지도는 절반을 넘어선 53%를 나타냈다. 하지만 16일 민주당과 새정치 연합이 통합신당 발기인 대회를 갖고 당명도 새정치민주연합으로 결정하는 등 통합 컨벤션 효과와 반영된다면 지지도 상승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가인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10~13일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1천211명을 상대로 휴대전화 임의번호걸기(RDD) 방식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8%포인트) 결과, 새누리당이 41%, 통합신당이 30%로 집계됐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새누리당이 지난주 39%에서 2%포인트 올라 40%선을 회복한 반면, 신당은 통합 발표 후 첫 조사인 지난 7일 31%에서 1%포인트 하락했다. 통합신당의 바람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지역별 통합신당 지지도를 보면 서울이 지난주 36%에서 이번주 29%로, 대전·세종·충청이 34%에서 25%로 각각 눈에 띄게 하락했다. 이는 통합신당 창당 발표에 따른 보수층 결집 현상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 기반 지역인 광주·전라서는 통합신당 지지도가 53%, 의견유보가 37%로 양측의 창당 행보를 관망 중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갤럽 측은 설명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광주 외국인 절반 광산구에 산다

광주에 사는 외국인의 절반가량이 광산구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 2월 현재 광산구의 등록 외국인은 7841명으로 조사됐다. 남자는 4965명(63.3%), 여자는 2876명이다. 광주 지역 등록 외국인은 총 1만5535명으로 광산구가 절반(50.5%)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 국적이 1515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1331명, 한국계 중국인 830명, 우즈베키스탄 655명, 캄보디아 602명, 필리핀 585명, 인도네시아 521명, 스리랑카 420명, 타이 284명, 네팔 206명 등이다. 거주지는 공단이 밀집한 하남동 1819명, 평동 1228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월곡2동 895명, 어룡동 879명, 비아동 485명, 첨단2동 402명, 월곡1동 380명 등이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박근혜 대통령, 염수정 추기경과 오찬

박근혜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천주교 지도자들과의 오찬에서 염수정 추기경과 인사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이날 오찬은 오는 8월14일로 예정된 교황 프란치스코의 방한과 관련, 범정부적 지원이 이뤄지는데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천주교 교황 방한 준비위원회의 요청으로 마련됐다. /연합뉴스

물고기 방류 5cm 이상으로

도, 수산종묘 방류사업 개선 참돔 등 고급어종 늘리기로

전남도가 20년 넘게 유지해왔던 수산종묘 방류사업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방류 물고기 크기를 키우고 그 종류도 국민의 소비 패턴에 맞추기로 한 것이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수산종묘 방류사업시 치어나 치패 크기를 기존 4cm 안팎에서 최소 5cm 이상된 종묘를 방류하기로 했다. 너무 어린 물고기를 방류하면서 생존율이 극히 낮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납치와 전복, 해삼 등 정착성 어종 위주로 방류하다 보니 어종의 다양성을 저해하고 기후변화로 연근해 서식 어종이 크게 변화된 흐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이에 따라 낚시꾼과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은 참돔과 감성돔 등 고급어종의 방류량을 늘리는 한편 방류 해역도 바다 숲이나 인공어초 조성 해역을 중심으로 해 생존율을 높일 방침이다. 수산종묘 방류사업은 지난 1988년부터 시행해왔으며 지금까지 25년간 모두 163억원을 투입, 30종 3억3800만 마리를 방류했다. 올해는 29억원을 들여 20종 2100만 마리를 놓아줄 예정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어종, 방법 등 방류사업 전반적인 문제점을 검토해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가 지난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남해지사아 위탁해 방류사업 효과를 조사한 결과 납치는 출현율이 87%, 해삼은 최고 22%인 반면 참돔은 출현율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원석기자 chadol@kwangju.co.kr

통일준비위원회 내달 출범 ... 박대통령 위원장 맡는다

장관급 부위원장 2명 두기로

통일준비를 위한 기본방향 및 제반 분야별 통일준비 과제 발굴·연구 기능을 수행할 통일준비위원회가 4월 중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이 위원회의 위원장을 직접 맡는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지난 14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 2월25일 박 대통령

이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를 신설해 체계적이고 건설적인 통일의 방향을 모색한다고 발표했바 있다”며 “이에 따라 그간 청와대, 통일부 등 관계부처 간 총분하고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통일준비위의 구성 및 운영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이 따르면 통일준비위는 앞으로 통일준비를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제반분야별 통일준비 과제를 발굴, 연구하는

등의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또 통일에 대한 세대 간 인식통합과 사회적 합의를 촉진하고, 정부 기관 또 사회단체, 연구기관 간 협력을 통해서 통일준비를 해 나간다. 통일준비위의 위원장은 대통령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정부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게 된다. 정부위원은 기재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 등 중앙행

정기관의 장과 청와대 외교·안보·통일 관련 정부급 공무원들이 참여한다. 또 정부 및 민간에서 각각 1명씩 2명의 부위원장을 둘 예정이다. 주 수석은 부위원장에 대해 “위원장을 대통령이 맡는 만큼, 아무래도 장관급이 돼야 하지 않을까 보고 있다”며 “민간 위원은 그에 상당한 경력과 통일 식견을 가진 분이 되지 않을까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직접 맡기로 한 것은 통일준비위의 위상이나 격을 다른 위원회보다 한 단계 끌어올려 통일 준비에 더욱 강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출판기념회서 선거법 위반 후보 잇단 고발

장흥·영암 선관위

출판기념회에서 책을 무료로 나눠주거나 가수를 초청해 공연을 한 입후보자들이 잇따라 검찰에 고발됐다. 장흥군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1500여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홍보를 한 뒤 100여명에게 140만원 상당의 서적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와 이 선거 캠프 운영책임자 B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영암군선거관리위원회도 최근 출판기념회 참석자 2000여명을 대상으로 자신의 업적과 관련한 홍보영상물을 상영하고, 가수를 초청해 공연을 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C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오광록기자 kroh@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경매”만이 살 길이다!

주식회사, 오천경매
직통, 010-3605-5000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339, 2001호

“경매”에 관한 모든 것!

- 특수비법 배우실 분!
교육비, 1200만원
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 공동투자 하실 분!
소유권 이전으로 보장
- 사무실 같이 쓰실 분!
권리분석 등 정보 제공